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 본격 시동

✎ 편집국 | ⓒ 승인 2014.10.08 13:18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공감' 발족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권리찾기 사업을 본격화한다. 민주노총 8일 오전 11시 공공운수노조연맹, 민주일반연맹, 여성연맹, 일반노협 등 해당 가맹조직과 함께 13층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공감' 발족식을 가졌다. '공감'은 민주노총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사업으로 3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감'은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전략조직화의 기본토대가 될 것이다. '공감'은 그동안 가맹조직별로 진행되었던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노총 차원의 통일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발족식에서는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 수립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권익향상 △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 개선 △ 비정규 노동자를 중심으로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사업목표로 공표했다.

‘공감’은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해당 연맹 임원들이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기획위원으로 총연맹과 해당연맹 간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날 발족식에는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이 축사를 통하여 “각각 진행되었던 사업을 하나로 모은 뜻 깊은 자리이다. 비정규직 문제,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야말로 민주노총의 전략적 방향이다. 가맹 산하조직 전체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서울본부 강용준 본부장은 “민주노총만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망이다. 서울본부를 비롯하여 전체 지역조직들이 힘을 합해 ‘공감’과 함께하겠다”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편집국 kctu2670@nodong.org